



## 치협 윤리위, 사무장병원 '윤단 폭격' 헛 회원장계 심사

보건료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윤리위)를 구성한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윤단폭격을 시작했다.

윤리위는 9월 21일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미 윤리위는 지난 4월 초도 회의를 개최하며 윤리위가 향후 나아가 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정황이 포착된 5건에 관계된 치과의사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심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진술을 통해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일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정확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찾기 힘들었으며, 빠져나갈 구멍 찾기에 바빴다.

이날 윤리위에 출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진술인이 있는 반면 정확한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한 진술인도 있었다.

이른바 자진납세형의 경우 "의료인으로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치협과 정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며 뉘우치는 등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진술인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특히 일부 진술인의 경우 위원들이 "본인 명의로 된 치과에서 사무장이 진료를 본다든 것도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 "진료 외에는 독서에 열중하는 스타일이어서 치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내역 등 사무장병원으로서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무언가 잘못됐다", "나는 잘 모르겠다" 등 뻔뻔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일부 진술인들이 추가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소명 자료가 도착하면 차기 윤리위를 열고 위원들의 법리적 해석을 거쳐 진술인들의 양형을 결정기로 결론내렸다.

아울러 윤리위 운영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마무리하는 한편 조만간 다시 윤리위를 열고 사무장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남섭 위원장은 "의료단체 중 가장 먼저 윤리위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윤리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보건료계의 윤리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특히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치아미백제 반드시 허가제품 사용"을 치협, 회원 주의 환기 당부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에게 거듭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요청받은 것과 관련 각 지부 및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의 무허가 치아미백제 시술이 적발된 당시 식약청이 공문을 통해 같은 내용을 요청한 데 이은 재강조 차원의 조치다.

치협은 이와 관련 최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무허가 치아미백

제에 대한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인지 및 홍보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공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고, 유효성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치아미백제 사용 시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내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시간 이상 교육시 최대 4점 인정” 보수교육위, 관련 세부지침 검토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이 개정,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이하 위원회)는 9월 25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보수교육 인정체제 및 세부지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시간을 일정 점수로 환산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술대회는 기관당 1회에 한해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최대 보수교육점수 4점을 인정키로 재확인했다.

또 위원회는 RF카드출결시스템 미운영 시 인정기준, 논문게재 보수교육 인정기준, 연수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한 연속교육에 대

한 인정기준 등 세부지침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나누고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검토해 관련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서버구축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보수교육으로 인해 회원들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세계 유수치과기업 성장 기대 김협회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면담

김세영 협회장이 이용섭 민주당통합당 정책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1인 소유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10월 10일 의원실에서 이 의장을 면담하고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구가 광주 광산구을인 이 의장은 민주당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기 위한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이 의원은 조만간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의원님이 지역구인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연구원이 설립되게 되면 국가신성장동력산업인 치과기자재에 대한 R&D을 통해 국민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면서 세계적인 치과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국내의료기기시장은 1조 2천억원으로 달해

수입 대체 효과가 엄청나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일부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통폐합 상황과 다르게 봐야하고 제도권 진입은 터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원 설립 당위성에 이어 김 협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김 협회장은 “1인 1개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 1인이 100개 뿐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의료기관도 소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민주당 당론과 같이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김 협회장은 “이 문제는 민간보험시장과 재벌이 끼어 들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영리병원과 꼭지점이 같다”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 나서 발본색원해야 함에도 미온적이다. 민주당에서 적극 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잘 알겠다”며 “비용추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